

이낙연, 공들인 광주·전남 법안 잇단 결실...여순사건법 '촉각'

아특별 통과 이어 한전공대 특별법도 제정 초읽기...여순사건도 강한 의지 오늘 선거지원차 전남 방문...여순사건희생자위령비 참배·유족 만나기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시절 공을 들였던 광주·전남지역 관련 주요 법안이 결실을 맺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아특별)이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

공대) 특별법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제 여순사건(여수·순천사건) 진상조사 등을 위한 특별법 처리가 남아 있다. 이 선대위원장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막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

다. 17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 선대위원장은 18일 순천과 고흥 보컬센터 지원을 위해 전남을 방문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선거지원 전에 여수에 있는 여순사건희생자위령비를 참배하고 유족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의 여수 방문은 여순사건 특별법 처리를 위한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앞서 이 위원장은 당대표 시절인 지난달 11일 설명회를 앞두고 순천의 여순항쟁위령탑을 참배하고 유족들을 만나 조속한 여순사건 특별법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이 공을 들였던 한전공대 특별법은 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심의 소위를 통과했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18일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국민의힘과 지리한 공방끝에 여야 합의로 법안 소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의 통과는 시간만 남았다는 분석이다. 한전공대 설립은 이 위원장이 전남지사 시절,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에게 건의해 공약화한 것으로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까지 혼신의 힘을 쏟아왔

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 선대위원장이 당대표 시절에 공을 들였던 아특별과 한전공대 특별법이 결실을 맺고 있다"면서 "다시 여수를 찾아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에 강한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 2월 설명절 전 한전공대 부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여순항쟁위령탑 등을 방문했다. 김민정기자



해운대해수욕장 둘러보는 민주당 지도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등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가 17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히 분양과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이후 해운대해수욕장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與 “野, 저급한 ‘文 대통령 사저’ 정치공작 중단하라”

“야당 대표의 ‘제2의 아방궁’ 사기극 정쟁 개탄스러워” “MB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이 불법 사저 특혜의 전형”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야권의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에 대한 의혹 제기를 ‘제2의 아방궁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며 ‘저급한 정치공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인호 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연일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양산 사저에 대한 쟁점과 뻔뻔함까지 장악한 저급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며 “귀농과 귀촌을 준비하는 대통령을 향해 또다시 ‘제2의 아방궁’ 사기극을 벌이려는 보수언론과 그 기사를 그대로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제1야당 대표의 행태가 참담하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실관계부터 명확하게 확인하길 바란다”라며 “무엇보다 대통령 사저는 경호법상 팔지 못하는 집이며, 농지법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대로 준비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저 특혜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을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라며 “아들 명으로 매입하고 부동산 차명보유, 불법

다운계약서, 편법 증거까지 일삼아 특검조사까지 받은 ‘불법 사저 특혜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은 즉각 악의적 주장을 중단하길 바란다”라며 “더 이상의 편법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정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지 말고, 공직자의 부당한 투기 이득을 막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전념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군소정당들, 박의장에 ‘정보제공동의’ 전달...전수조사 촉구

정의·열린민주·기본소득·시대전환 “부동산투기 관여하는 건 근절해야”

군소 정당 4개당이 17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자당 몫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전달하면서 국회의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신속 추진을 촉구했다. 정의당 강은미,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시대전환 조정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 의장을 예방했다. 박 의장은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300명 전수조사를 이야기했을 때 제가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며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특히 부동산투기

에 이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범위를 직무상에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내부정보 활용으로 범위를 넓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적어도 공직자가, 또는 관련된 자들이 부동산투기에 관여하는 건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은미 원내대표는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민정 원내대표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불로소득, 팜투기나 이런 것이 힘들게 노동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인식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고 거듭했다. 조정훈 원내대표는 “자기집 하나가 있는 건 괜찮지만, 주시 백지신탁 제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실에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신속 추진을 위해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박병석 국회의장에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박 의장,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도가 정착된 것처럼 부동산 백지신탁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라고 건의했다. 그러자 박 의장은 “이렇게 국민들의

상실감을 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해야 한다”며 “여러분 뜻하고 제 뜻하고 다르지 않다”고 화답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